



## 불평등을 심화하는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할 것인가

2014.02.14 | 정태인\_새사연 원장 | ctain60@gmail.com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보다 더 빨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 실업수당 등 복지의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경제민주화)과 사회적 경제의 확대를 통해 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엘렌의 하원 청문회 – 기존 연준 정책의 지속

2월 11일 자넷 엘렌이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내정자)의 자격으로 하원에서 첫 증언을 했다. 1) 엘렌은 먼저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작년 하반기 GDP는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양적완화 정책 이후 실업율도 1.5%p 낮아졌다.

그러나 엘렌은 “노동시장의 회복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far from complete)”고 강조했다. 실업율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최대 고용수준에 상응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다(well above)는 것이다. 그가 비둘기파<sup>2)</sup>이며 진보적 노동경제학자 출신으로 특히 고용동향에 신경을 쓴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엘렌은 핵심 소비자 지출 지수(PCE)가 작년에 단 1% 올라서 연준의 장기 2% 목표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 Yellen, 2014, Semiannual Monetary Policy Report to the Congress, Before th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testimony/yellen20140211a.htm>

2) 정치·사상·언론 또는 행동 따위가 과격하지 않고 온건한 방법을 취하려는 사람을 뜻하는 말.



엘렌 의장은 연준의 장기 목표가 최대의 고용과 물가안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근 불안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로선 미국 경제전망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a great deal of continuity) 강조했다.

2008년 말 이후 제로 금리가 되면서 사용한 “덜 전통적인 수단”인 자산 구입과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sup>3)</sup>, 즉 양적 완화를 계속하되 지금처럼 그 규모를 완만한 속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2월부터 매달 100억 달러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그 속도를 미리 정해 놓지 않고 연준의 상황 판단에 따라 조절하겠다고 한다.

배포된 연설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엘렌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점증하는 불평등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현재 미국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가하는 불평등이 고용의 증가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연준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고 양적완화 속도를 늦추는 게 불평등을 완화할 수는 없을텐데<sup>4)</sup> 그렇다면 엘렌이 월스트리트의 고삐를 쥘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엘런도 무어의원(민주당)의 질의에 “연준의 정책수단은 불평등경향을 다루는데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바흐만의원(공화당)이 의회가 연준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엘렌은 연준이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연방회계국(GAO)의 감사를 받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멀바니 의원(공화당)이 정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연준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전적으로 재무부의 소관”이라고 대답했다.

즉 버냉기 시절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고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 엘런의 의견이며, 아르헨티나 등의 금융혼란은 지켜보긴 하겠지만 연준의 정책을 수정할 변수는 아니라고 밝혔다.

3)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에 대한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일컬음. 통화정책 성명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중앙은행이 의도하는 정책금리 향방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향후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공표하고 이에 맞춰 정책금리가 운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방식 등으로 행해진다.

4) 뒤에 보듯이 현재 미국 상황에서 양적완화는 경기가 급락하는 것을 막고 있지만 회복의 결과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기회복은 지속가능할까?

노동경제학자 출신인 엘렌이 경기와 소득분배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현재의 경기회복은 소득의 불평등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만 의 주장대로 현재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부의 불평등 심화라면 현재의 회복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사에즈(버클리대)의 최근 논문<sup>5)</sup>은 2008년 위기 이후의 회복과정에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우선 [표1]을 보면,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면서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다. 미국경제는 기본적으로 돈을 풀어서(양적 완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을 올린 덕에 연간 1% 남짓 성장을 거두었는데,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

[표1] 집단별 실질 소득 성장

Table 1. Real income growth by groups

	Average Income Real Growth (1)	Top 1% Incomes (2)	Bottom 99% Incomes (3)	Fraction of total growth (or loss) captured by top (4)
Full period 1993-2012	17.9%	86.1%	6.6%	68%
Clinton Expansion 1993-2000	31.5%	98.7%	20.3%	45%
2001 Recession 2000-2002	-11.7%	-30.8%	-6.5%	57%
Bush Expansion 2002-2007	16.1%	61.8%	6.8%	65%
Great Recession 2007-2009	-17.4%	-36.3%	-11.6%	49%
Recovery 2009-2012	6.0%	31.4%	0.4%	95%

Source: Piketty and Saez (2003), series updated to 2012 in August 2013 using IRS preliminary tax statistics for 2012.

Computations based on family market income including realized capital gains (before individual taxes).

5) (Saez, 2013, Striking the richer: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real-world economics review, No65.



1% 소득은 31.4% 만큼 늘어난 반면 하위 99%의 소득은 겨우 0.4% 늘어났다. 즉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경기를 끌어 올렸다는 얘기다. 1990년대 이후 전 기간 동안 상위 1%의 소득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만 2009년에서 2012년의 회복과정에서는 이 집단이 전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5%에 이른다.

[그림1] 상위 10% 소득 비중, 191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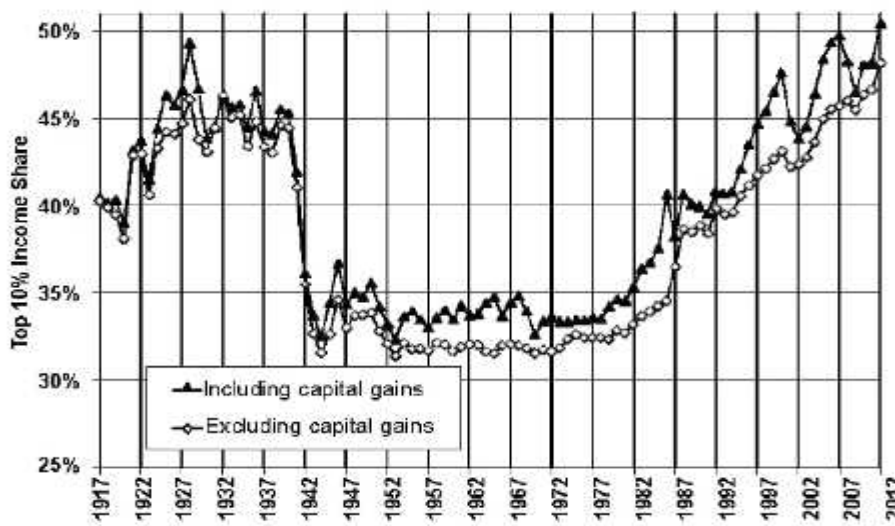


Figure 1: The top decile income share, 1917-2012

Source: Table A1 and Table A3, col. P90-100.

Income is defined as market income (and excludes government transfers).

- In 2012, top decile includes all families with annual income above \$114,000.
- 2012 data based on preliminary statistics.

한편 [그림1]은 1917년에서 지금까지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45-1975년까지 이들의 소득은 30% 남짓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대공황기와 최근 위기에는 50%에 육박했다. 즉, 경기가 일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 그림을 통해 짐작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해 현재의 경기회복세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기회복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기회복이 양질의 일자리 증가를 동반하지 않고 또 다시 자산 거품에 의한 소비확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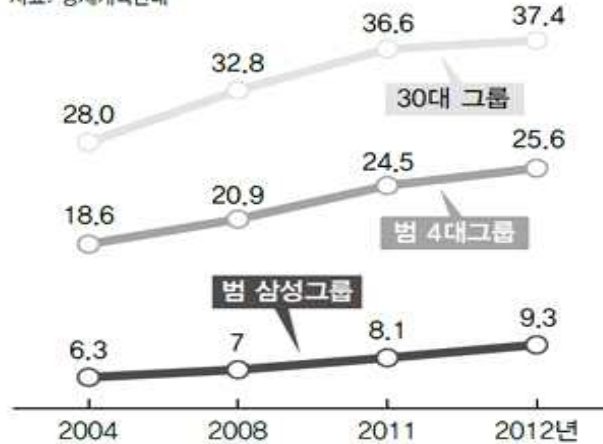
2013년 경제 성장율은 증가했지만 월간 순 일자리 창출은 19만 3천개로 2012년의 18만 6천개 수준에서 약간 증가한 것에 불과하고 위기 이전의 평균 20만개에 미달하고 있다. 고용 역시 위기 이전 정점에 비해 110만 명이 모자라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77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sup>6)</sup> 타이슨은 위기 이후 노동시장 참가율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실업율은 12%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동자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나서 70%의 노동자 임금은 아직 위기 이전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 한국경제의 불평등 심화

[그림2]는 경제개혁연구소의 ‘재벌 및 대기업으로 경제력 집중과 동태적 변화분석’ 보고서(작성자 위평량 박사)를 요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재벌의 자산 총액과 국가 전체 자산을 비교했다.

[그림2] 전체 국가 자산 중 재벌 자산 비중 추이

전체 국가 자산 중 재벌 자산 비중 추이 (단위: %)  
\* 자산은 금융부문 제외 기준. 범 삼성은 삼성·씨제이·신세계·한솔·중앙  
일보 포함. 범 4대그룹은 삼성·현대·에스케이·엘지 포함.  
자료: 경제개혁연대



출처 : 한겨레신문 2월 11일자

6) Tyson, 2014, Putting America's recovery to work, Project Syndicate.  
<http://www.project-syndicate.org/print/laura-tyson-explains-why-most-american-workers-have-not-benefited-from-the-us-economy-s-accelerating-growth>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금융법인 제외)의 자산이 국가 전체 자산(비금융법인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1.7%에서 2012년 37.4%로 커졌다. 더구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들 그룹 자산의 비중이 32.6%에서 37.4%로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 삼성 가문에 속한 5개 그룹(삼성·CJ·신세계·한솔·중앙일보)의 자산의 비중은 2000년 6.7%에서 2012년 9.3%로 커졌고, 삼성·현대(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에스케이·엘지 등 범 4대 재벌 가문 자산이 국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2.9%에서 25.6%로 늘었다.

같은 재벌그룹 안에서도 상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해졌다. 상위 200대 기업 안에 속한 5대 재벌 가문 소속 계열사의 자산 비중은 1987년 26.6%에서 2012년 43.2%로 증가했고, 범 삼성 가문의 자산 비중은 같은 기간 5.3%에서 19.1%로 높아졌다.

보고서 작성자인 위평량 박사는 “삼성 등 상위 재벌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노력인데, 박근혜 정부의 재벌 중심 성장전략 회귀는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 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엔 소득분포를 살펴 본 것이고 이 보고서는 재벌의 자산 비중을 중점적으로 본 것이니까 이를 직접 대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불평등 심화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기회복 역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로 보아 이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한국의 현재 회복세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새사연이 “리셋 코리아” 에서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전략” 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즉 현재의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보다 더 빨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 실업수당 등 복지의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경제민주화)과 사회적 경제의 확대를 통해 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논쟁 노골적인 “줄푸세”, 그 중에서도 특히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 금년 성장률이 3%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곧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